
[보도요청]MB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발표회 및 공안탄압 대책기구 발족 기자회견

2008년 10월 14일 오후 10:23

[보도요청서]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Tel 02-2631-5027 Fax 02-2631-5029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6층

제 목 | MB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발표회 및 공안탄압 대책기구 발족기자회견 (10.14. 총1쪽)

발 신 | (가)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담당 : 황순원)

『MB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발표회』 및

『(가)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더이상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촛불정국 이후 1% 특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촛불탄압, 공안탄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유모차 부대 소환을 비롯한 무차별적 연행, 구속, 수배, 손배소 등 검찰과 경찰을 앞세운 촛불보복이 잇따르는 가운데 불법시위 집단소송제와 집시법 개악 등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에 앞장선 네티즌을 구속하고 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하여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압수수색과 시민단체 보조금 제한 등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부당국의 기도가 노골화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노련 사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탄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 진보진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 국정원법 개악과 더불어 국정원, 기무사, 보안수사대 등 공안기구가 대대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검찰청 공안 3과까지 부활! 하고 있습니다. 마치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이 연상될 만큼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와 공안탄압이 대단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권의 촛불 탄압과 공안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발표회』 및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취재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촛불이 타오른 청계광장

■ **순서** : 여는 말씀(민가협) / 공안탄압보고서 발표(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 네티즌 탄압 사례보고(네티즌 단체) / 정보인권 탄압(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야간집회 위헌심판 보고(민변 박주민 변호사) / 국가보안법 탄압사례(사노련공대위) / 발족기자회견문 낭독(회견문 첨부) (끝)

(가칭)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문

민주주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며 끝을 모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을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짓밟은 것을 시작으로, 온 사회를 국가보안법과 공권력의 공포 아래 지배하며 언론과 광장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나섰던 시민들을 향한 보복 수사엔 광기마저 어려 있다.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분말 소화기를 뿌려댄 것은 정작 경찰이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여성들에게 아동학대죄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섰던 촛불자전거들은 아예 면허를 취소하여 생계를 끊어놓겠다고 한다. 방패를 휘두르는 경찰 앞에서 맨몸으로 시민들을 보호했던 촛불 예비군을 체포하여 처벌하겠다고 한다. 이 모든 이들을 억박질러 있지도 않은 배후 조직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 운동에 대한 탄압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세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난도질하며,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해온 단체들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탄압이 집중되고 있다. 다시는 시민들과 사회 운동이 고개를 들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이 기회에 철저히 군함발로 짓이겨두겠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온갖 성벽을 쌓는데 여념이 없다. 집시법을 개악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광장을 철저한 관리 하에 두려 한다.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하여 시민들의 소통을 검열하려 한다. 공영방송을 장악하여 권력의 확장기로 만들려 한다.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를 확장하여 온 사회를 빅브라더의 감시 아래 두려 한다.

이렇게 온 사회로 확대된 탄압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모든 권력을 국민의 손이 아닌 권력자에게 집중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집중된 권력을 써서 모든 저항을 뿌리치고 우리 사회를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지금의 탄압은 총체적인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탄압에 직면해 우리들은 개별적으로 싸우기보다는 힘을 모아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려 한다. 촛불을 지켜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권력자와 시민 중 누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가려내기 위해, 우리들은 어깨 걸고 권력에게 저항할 것이다.

올해는 UN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인권은 이미 전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광기의 독재정치를 일삼는 시대착오적인 반인권적 억압권력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위기의 이 순간, 우리들은 시민들, 누리

꾼, 사회운동 간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인권을 수호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억압 권력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8년 10월 15일

참가단체 일동